기 고

나주영상테마파크 철거, 시민 공론화 우선돼야

나 성 운
나주사회경제시민연대 대표

이달 초 나주 시내 곳곳에 갑자기 현수막이 나붙었다. 나주영상테마파크 전통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다. 순간 '왜 갑자기 철거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자리에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이하 '의병박물관')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임진왜란 이후 3·1 운동 이전 구한말까지 외세의 침탈에 맞서 의롭게 싸운 의병들의 충혼을 기리고 역사·교육·관광에 활용하기 위한 의병박물관 조성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나주시가 다른 시군과의 경쟁 끝에 유치했지만, 드라마 도깨비· 주몽·태왕사신기 등을 찍어 이미 유명 관광지로 알려진 영상테마파크를 철거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다.

영상테마파크는 '주몽 세트장' 또는 '삼한지 테마파크'로 불리기도 했다. 단순 드라마, 영화 촬영 세트장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의 민속촌으로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었을 것이다. 드라마 주몽으로 전 국민이 다 아는 유명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한 해 수백만 명이 몰려오기도 했다. 한창 붐빌 때는 수㎞의 자동차 행렬이 장사진을 이뤘다. 나주에 '주몽 택시'가 달리고, 나주대학은 고구려대학으로 학교 명칭을 바꾸기까지 했다.

주몽 세트장을 지을 당시 신정훈 시장(현 국회의원)은 "임시 건축물이 아니라, 두고두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구 건축물로 견고하게 제대로 지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여러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으로 쓰이기도 했고 지금 봐도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견고한 전통 건축물로 남아 있다. 드라마 기획사 관계자들에 의하면 전국 어디를 가도 삼국시대를 촬영할 수 있는 이만한 시설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당시 조성비는 무려 137억 원이었다. 그런데 불과 15년만에 의병박물관에 밀려 철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철거 현수막이 내걸린 뒤 시민단체는 SNS를 통해 시민 18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열 명 중 여섯 명이 철거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아홉은 철거를 반대했다. 그중 여덟 명이 강력 반대였다. 또 열 명 중 여덟 명이 "영상테마파크 옆에 의병 역사박물관을 지어야 한다" 고 답했다. "철거 전 공론화를 거쳐 더 나은 대안이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힌 시민도 열 명 중 여덟 명에 달했다.

시민단체에서 관련된 입장문이 네 차례나 나왔다. 요지는 이렇다. "시민들은 의병박물관을 반대하지는 않으며, 영상테마파크와 의병박물관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주시 대응은 시민들의 기대나 순리와는 사뭇 달랐다. 철거에 대한 공론화보다 의병박물관 건립을 위해 철거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대답이었다. 일단 영상테마파크를 철거한 다음에 의병박물관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이야기다.

시민들은 철거 강행보다 둘 다 살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보자는 것인데도 나주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님에도 선입견을 갖고 다른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을 어떻게 열린 시정, 소통 행정이라 할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더 살펴보지 못한 것을 낯부끄러워 하고 더 낮은 자세로 민의를 경청해야 한다.

의병박물관 부지는 약 11만 평이다. 영상테마파크는 4만 평이다. 7만 평 정도가 늘어난다. 의병박물관 건축 연면적은 2000평이다. 2층으로 지을 경우 단면적은 1000평에 불과하다. 전체 부지 면적의 1%가 되지 않는다. 1000평의 의병박물관을 짓기 위해 4만 평의 영상테마파크에 있는 크고 작은 100여 개 건축물 대부분을 부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에 어긋난다. 고구려 궁 하나 존치하겠다고 하지만 궁색하기 짝이 없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금이라도 영상테마파크 철거 전에 시민들과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으로 더 나은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민의를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의병박물관의 건립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쓴 소리도 애정과 관심, 사랑이 있기에 하는 것이다. 리더는 모름지기 포용과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낮은 목소리를 하나하나 경청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응급실 뺑뺑이'와 의대 정원 확대

김 종 선
광산구 의사회장
고려인 광주진료소장

매주 화요일 저녁에 운영되는 무료 진료소인 고려인 광주진료소에는 자원봉사하는 의대생들이 있다. 봉사하는 착한 의대생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필수 의료 기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필수 의료에 지원하는 것은 루저(looser)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리고 부모님이 힘든 과를 지원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한다. 부모님 의견에 따라 자신이 평생 진료할 과목을 선택한다는 사실은 놀라움과 충격이었다. 코로나 시기에 광산구 백신센터를 세팅하는데 참여했던 필자는 의대생의 백신센터 봉사를 기획했다가, 학업 이외의 활동에 반대하는 학부모의 항의로 기획을 포기한 적도 있으니, 사실 놀랄 일도 아니었다.

의사는 사위는 시켜도, 아들은 안 시킨다는 말이 있었다. 환자의 죽음을 마주하는 수련 과정이 길고, 힘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 의대 과별 빈부 격차가 생겼다, 건강보험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필수 의료는 저수가와 힘든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고, 건강보험과 관계가 적은 진료과는 저수가와도 관계가 없고, 수련 과정이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다.

저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은 인기 과를 더 인기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기 과는 저수가와 관계없는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가의 정상화는 진료과별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어,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루저라는 말은 없어질 것이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때 약속했던 저수가의 정상화를 과감하게 실천했으면, 지금의 필수 의료 분야의 붕괴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이제부터 필수 의료 인재를 양성한다 해도, 최소 10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고려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늦었지만, 적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언론에서 '응급실 뺑뺑이'란 자극적인 말로 응급실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1차 치료를 하고, 전문 과로 배치를 하는 플랫폼과 같은 곳이다. 응급실이 포화가 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수요(환자)가 많아서 포화이거나, 공급(진료의사)이 부족해서 일 것이다,

119에서 응급 환자를 후송할 때, 권역응급 의료센터(대학 병원)로 전원하는 이유는 사실 환자나 보호자의 민원과 관계가 있는 경우도 적지않다. 코피 환자를 보다가 '뇌피'(뇌출혈) 환자를 못 보게 되는 응급 의료센터이다. 응급 의료센터는 편의점과 같이, 원하면 드나들 수 있는 편의 의료센터가 아니다.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표라는게 있다. 이에 맞춰 환자를 분류해서 적정한 병원으로 후송하게 하면, 응급 의료 체계는 완성된다.

정치권에 부탁하고 싶다. 119 대원에게 면책 특권을 주고, 매뉴얼대로 응급 환자를 이송할 수 있게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내 판단으로는 당신은 경증이니 동네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구조사가 말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카카오맵, T맵처럼 응급 의료 지도가 있어야 한다. 119를 부르면 중증도 1단계 환자는 어느 병원으로, 중증도 5단계 환자는 무슨 병원으로 응급 의료 지도에 맞추어 신속하게 이송되어야 한다. 지도(맵)를 관리하는 사람은 월별, 일별로 진료과별 의료진, 수술 여건을 파악하고, 부족한 진료과가 있으면, 미리 채울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 만성적으로 부족한 진료과의 의료진은 광주시에서, 전라남도에서 직접 타 지역 의료진을 스카우트하고, 미충족 진료과 의료진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필수 의료 진료 의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의사를 충분히 양산하면, 남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로 가지 않겠냐는 단순한 논리와 의대를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의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시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 백 세의 건강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시대이다. 의대를 온 학생들이 본인의 건강과 행복을 지역 사회에 희생해야 하는 필수 의료로, 전공 분야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필수 의료는 환자의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치료 중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예상치 못한 장애를 가지게 된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의료 소송은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소송이 치료 위축으로 결론이 나선 안 된다.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넌 환자만 열심히 봐,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라고 하는 지역 사회의 공감대 및 합의가 필요하다. 수술하는 의사는 평생을 수술할 수가 없다. 필수 의료를 수술하는 의사가 60세까지 수술을 하면 본인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그에 맞는 보상을 아까워해서는 필수 분야 의료를 충족시킬 수 없다.

기 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기업에 달렸다

김 영 주
(사)광주·전남ICT협회 회장
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최근 광주지역혁신연구회가 '베이비붐 세대를 통해 균형 발전의 희망을 보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발제자는 균형 발전의 실험적 해답을 제시했다. 1955년부터 1974년까지 태어난 1685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를 활용하면 노인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까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속 성장 시대를 지나며 도시와 농촌,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극심해지자 균형 발전이란 정책 과제의 순위가 높아졌지만 그 정의를 놓고는 아무도 명쾌하게 규정하지 못한다. 균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주장하는 주체들이 다양하고 의견을 통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구·소득·사회 인프라·삶의 질· 행복 지수 등 어떤 항목, 어떤 기준을 정해 어디와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 합의하지 않고 백가쟁명의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혁신적으로 추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사업은 명목상으로 완료됐는데도 기대했던 효과는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주말과 밤에는 인적이 사라지는 혁신도시가 그 증표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의 정치력으로 획득했던 야심찬 사업들이 그 엄청난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성과를 내는 것 같지 않다. 잠시 쌈박하게 시민의 관심을 받다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또다시 새로운 거대 담론들이 정치판, 선거판에 이어진다. 우리 지역의 1조 가까운 예산이 집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한전을 포함한 17개 대표적인 공공기관들이 이주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등 대표적인 거대 사업들은 추진 시 장담했던 성과 달성은커녕 지속적으로 부담과 문제가 커지고 있다.

여러 경제 지표에서 대구·부산이 광주보다 더 어렵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빠져 나가는 지역도 대구·부산이고, 청년 인구의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광주라는 통계도 놀랍다. 이유는 바로 기업, 일자리다. 광주가 억울해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정치적인 차별과 홀대가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다. 고속 성장기에 산술적 균형을 뒷전에 둔 산업 정책으로 부산·대구에 집중됐던 섬유·신발·합판 등 제조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래 일자리가 없었기에 소득도, 청년 감소율도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인 거다. 대구·부산은 보수·진보를 아울러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 자리를 이어 배출한 지역이다. 정권이나 정치가 경제든 인구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아니라는 증좌다.

우리 지역의 가장 아쉬운 점은 기업과 경제에 대한 이해와 호감이 덜하다는 것이다. 균형 발전에 대한 아쉬움이나 불만이 우리 때문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 지방 대학이 문을 닫고, 병원과 기업이 어렵고, 청년이 직장을 잡지 못해 심각해지는 결혼 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아무리 정치적인 힘으로 요구해도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 원인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합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어젠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급한 과제다. 대학의 근본 문제는 학생, 학부모라는 고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고령화 저출산은 결국 그 생산 자원인 청년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인구 문제와 균형 발전의 유일한 해결책은 기업이다. 자생 기업이든 외지의 기업이든 우리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들이 마음 놓고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社說

오염수 방류 반발 확산…국민 불안 해소책 있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하면서 전남 지역 어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데다 국내 최대의 수산물 생산지여서 다른 지역보다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는 그제 목포 사무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긴급 이사회를 열고 오는 23일 완도 앞바다에서 지역 어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어민들은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근 설비 시운전 등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어민들 사이에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21년간 바다에서 전복 양식을 하며 생계를 꾸려 온 박남수 진도수산경영인연합회장은 민물 양식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강옥수 영광군 월산어촌계장도 민어 대신 방사능 걱정이 덜한 낙지잡이를 시작했다. 초기 투자 비용 등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생계의 터전인 바다를 등지는 어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확산 일로다. 바닷물로 만드는 천일염은 방류 전 사 두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품절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은 불안감을 떨쳐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자체 검증보다 일본 측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고 있고, 수산물 삼중수소 등 방사능 검사법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영향도 크다.

오염수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정부는 오염수 시료에 대한 독자적인 방사능 분석 등 과학에 근거한 정보를 토대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방류 강행으로 어업인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옛 전남도청 복원 5·18정신 올곧이 살려야

1980년 5·18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옛 전남도청 별관에 있던 복원사업추진단이 인근 전일빌딩 245 건물로 이전을 결정하고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은 505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도청 본관과 별관, 경찰국 본관 및 민원실, 상무관 등 5·18 사적지 여섯 개 동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옛 전남도청은 2015년 개관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전남도청과 연계해 건립되면서 원형 일부가 훼손됐다. 문화전당 출입로를 만들면서 도청 건물이 두 동강 났고 계엄군의 진압을 알렸던 방송실 자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시절, 5·18 역사 지우기 논란 속에 오월어머니회 등 지역 사회가 도청 원형 복원을 요구하며 장기간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원형 복원을 결정하면서 논란을 잠재웠는데 그로부터 4년 만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복원사업추진단은 논란이 일었던 미디어월은 철거 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착공에 들어가는 만큼 이제부터는 복원 과정에 5·18 정신을 올곧이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 전 지역사회 전문가들은 복원 모델 도출을 위한 세미나를 갖고 '민간 주도'와 '정신 계승' 등 5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폭력의 당사자인 국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세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의견 수렴 조사 결과를 보면 복원의 최우선 목표로 일반 국민들은 5·18 정신과 가치를 추모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꼽은 데 반해 5월 관계자들은 문화유산으로서 원형 보존에 방점을 뒀다. 110억 원에 달하는 전시 콘텐츠 예산을 적극 활용해 국민과 5월 관계자의 시각차를 좁히고 민주화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아파트와 라면

주택 가격은 일반적으로 토지 비용과 건축비가 결정한다.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된 건축비는 물가 수준에 따라 변동하지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문제는 토지 비용이다. 일자리, 더 나은 삶 등을 위해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었고,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갈수록 주택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19세기 유럽을 휩쓸면서 도시 내외에 토지를 소유한 귀족, 부르주아 등 지배 계층은 큰 돈을 벌었다. 주택, 공장, 기반시설 등이 필요해지면서 개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자, 서민은 너무도 열악한 곳에서 질병과 빈곤에 시달리며 죽어갔다. 정부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겼고 도심이나 외곽에 저렴하지만 어느 정도 질이 보장된 공공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토지 수용이었다. 공공·공익 시설을 짓기 위해 적정한 가격으로 해당 토지를 강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도시 정부에 부여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토지공유제 도입으로 일부 반영됐고, 독일은 1874년 토지수용법을 제정하는 등 20세기 초까지 유럽·미국 등은 관련 법률을 정비했다. 우리나라도 1962년 1월 토지수용법을 제정했다.

호반건설이 수도권 일대 23곳의 공공 택지를 '벌떼 입찰'로 분양받아 5조 8575억 원의 분양 매출과 1조 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올렸다고 한다. 공기업이 토지를 싼값에 강제 수용한 뒤 이를 넘겨받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 건설사가 고분양가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긴 것이다. 비단 호반건설만 그리했겠는가. 지금까지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이 아니라 건설사와 투기꾼들의 부 축적에 기여하도록 손 놓고 구경한 것이다.

광주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3.3㎡(한 평)에 3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가 나오는 등 터무니없이 급등하고 있다. 투기로 수익을 챙기려는 이들 때문이리라. 고분양가로, 투기로 쉽게 비정상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건설사와 부유층을 엄중히 단속하고 가혹한 벌칙을 가해야 한다. 최근 경제부총리의 경고를 들은 라면업계가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라면이 문제인가.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